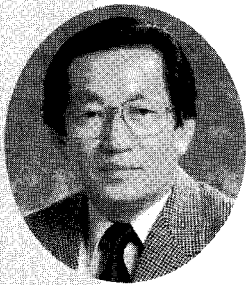


농정여건과 신정부에 거는 기대

농업인 사기저하로 농업전망 흐려져 직업농업 흔들
농기부채·소농·농민복지 등 현실문제 최소화 시책 기대해야



권 원 달
충북대학교 교수

농정여건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하강, 일본의 경기침체, 아시아의 통화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아시아 경제의 금융위기로 소비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농산물 생산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98년도 국내 경제성장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며 사상 유례없는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그리고 고금리체계가 경제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농정여건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에 적응하

기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99년도의 재협상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성장율은 -3.5%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산물가격도 상승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림업취업자수도 자연감소를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으로의 귀농인구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농업생산여건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환율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금리부담 증가와 재정긴축에 따른 농업투융자규모 축소로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3일 이후 IMF 자금 지원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은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세출삭감과 세입증대라는 재정긴축으로 농업부문 예산이 감축될 전망이다.

물가안정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농산물가격 안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수요억제와 수입농산물이 증가될 전망이며 실업의 증가는 농산물 구매력을 감소시켜 수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료·농약·사료 등 농업용 원자재 수입가격 인상은 국내 농업자재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농가부담을 늘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은 수입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수입농산물 소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또한 환율상승은 우리농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용이해 지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통산업부문에 외국인 투자는 크게 확산되고 신업태의 진출로 국내 유통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며 국내 유통산업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농정여건은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며 농업에 대한 전망이 흐려진다는 점이다. 그동

안 전업농과 영농후계세대 중심의 농민층이 산업으로서 영농활동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의 여파는 영농조건을 악화시켜 직업으로서 농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부문별로 보면 쌀농사는 2년 연속 풍작과 구조조정이 정착되어가고 있고 소비량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배면적도 상대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가격상승도 예상된다.

축산부문은 사료값 인상 영향으로 양축농가 사육비를 상승시키고 투매현상이 계속되어 산지소값이 하락되고 있으며 양돈, 양계산업도 불안정하여 축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채소 과실부문도 석유가격 인상으로 시설채소부문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소비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다.

농정과제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최근 IMF구제금융으로 파생된 농업문제들은 당면한 현안문제들이다.

당면한 농정과제들은 우선 IMF체제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농업용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로 고회환 시대에 맞는 농업경영 전략을 조기에 실천하는 일이다.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유류 등 원자재의 가격안정과 조기 확보, 유통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일이다.

UR농업협정에 따른 99년말부터 차기 협상을 위한 국제협상대책의 추진과 각종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상이변인 엘니뇨 발생에 따른 장단기적 영농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시책개발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농업정책은 쌀 자급기반의 확충 및 쌀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농업전문인력의 육성과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지원, 소비자 지향적인 신 유통체계의 구축, 수출농업의 실현, 농촌 생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그리고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시책·제도의 정립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농정과제들은 연속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98년의 경우는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를 최소화하는 시책들이 정책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목적으로서 농업발달을 통한 농업생산력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강조되는 것은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책들

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이다.

신정부에 가는 기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기대하는 농업정책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국민들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농민은 물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선거공약 이외에도 최근 IMF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해 농업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충격들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농정추진은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에 집중되고 있었다. 세계무역기구체제로 출범되면서 우리농업도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쌀산업 부문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농정시책은 농가간, 지역간, 품목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간에도 교역과정에 품질과 가격경쟁에 대항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 판매, 인력육성,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전업농·기업농·영농조합 법인이 주체로 육성되었으며 생산 및 판매과정도 규모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농문제가 대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며 이제 소농대책에 대한 현실적 처방이 신정부가 안고있는 정책개발 과제이다.

최근 대통령당선자에 의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이 밝혀지면서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어느때 보다 크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농업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판로개척으로 집약되었고 농가부채, 소농문제, 농민복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농어업은 특별대책이 필요한 산업으로 보고 그 역사성과 현실적 필요성에서 정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비교우위론에 가려져서 농어촌이 파멸되었으며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농가부채가 증가되어 부채의 상환유예나 이자경감문제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농업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중 판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방법으로서 산지직거래를 강조하는 것도 새로운 시책 방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에 기대하는 농정과제는 우선적으로 IMF충격으로 나타나는 현실 농업문제를 완화하는 문제이다. 최근 영농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각종 농자재와 면세유류 공급문제들이 충분한

물량공급과 가격안정이 선행되어야 영농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농업부문에 각종 원자재가격이 줄줄이 상승하여 생산비를 인상시키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물가억제로 농산물소비가 침체되어 농가는 2중의 고역을 치르고 있다. 도산농가 특히 시책적으로 장려되던 농가와 품목 또한 도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책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도 높이고 안정되게 가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소농보호대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등 안전농산물 생산과 판로개척도 기존영농체계를 보완하고 파괴하지 않는 형태로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농가 부채문제는 96년말 현재 호당 1천1백73만원이고 총부채는 17조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상환유예와 이자경감 노력이 가시화되고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부채없는 농가와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유통문제는 직거래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도매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보완적으로 직거래가 추진되어 다원적인 판로선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농민들도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농악정보**